

보도 일시	(인터넷) 2023. 2. 6.(월) 14:00 (지 면) 2023. 2. 6.(월) 14:00	배포 일시	2023. 2. 5.(일) 12:00
담당 부서 <총 괄>	교육부 사회정책총괄담당관	책임자	과 장 안웅환 (044-203-7261)
		담당자	사무관 김상덕 (044-203-7267)

2023년 제1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

주요 내용

- “자유와 가치와 든든한 연대가 만드는 희망의 대한민국” 실현을 위한 「2023년 핵심 사회정책 추진계획」 발표
- 수어 사용 국민의 공정한 정보 접근과 문화 누림 확대를 위한 「제2차 한국수어 발전 기본계획」 및 숨쉬기 편안한 지하철 환경 조성을 위한 「제4차 지하철 역사 공기질 개선 대책」 마련

- 교육부(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)는 2월 6일(월)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한다.
- 이번 사회관계장관회의 심의 안건은 ①2023년 핵심 사회정책 추진계획, ②제2차 한국수어 발전 기본계획(2023~2027), ③제4차 지하철 역사 공기질 개선 대책(2023~2027)으로,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.

2023년 핵심 사회정책 추진계획

- 「2023년 핵심 사회정책 추진계획」은 2023년 사회부처가 협업하며 역점을 두고 추진할 분야를 중심으로 사회정책의 비전과 목표, 주요 정책 과제를 담은 것으로 15개 사회부처가 공동 수립하였다.
- 동 계획은 “도약하는 미래”, “함께하는 연대”, “안전한 일상”이라는 사회 정책 목표 하에 총 9개 주요 과제 및 27개의 세부 정책과제로 구성되었다.

① 글로벌 강국으로 도약하는 미래

[인구구조 변화 대응]

- 교육·돌봄 국가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유보통합 단계적 추진, 부모급여 도입,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, 늘봄학교 운영 등 양육 지원정책을 강화한다.
 - ※ 부모급여 도입(0세 70만원, 1세(22년 출생아) 35만원),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(+540개소),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시간 및 지원가구 확대(연 960시간, 8.5만 가구), 늘봄학교 시범운영(5개 교육청) 등
- 국민 개개인의 위기 대응력, 회복탄력성 제고를 위해 기초학력, 직무 훈련·경력개발, 평생교육 등 생애 전(全)주기적인 사회참여역량 향상*을 지원하고 취약위기 가족 사례관리 및 생애주기별 1인 가구 지원 프로그램 등 서비스를 제공한다.
 - * 평생교육바우처 대상 단계적 확대(2023년 6만 명 → 2027년 18만 명), 기업직업 훈련카드 신설(307억원), 중소기업 재직자 경력설계 지원(2023년, 5,000명) 등

[청년의 희망사다리 복원]

- 청년의 원활한 사회 진출·적응을 위해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* 신설, 일·경험 프로그램 확대 등을 추진하고, 청년도약계좌 신설, 공공분양 34만호 공급 등 자산 형성 및 자립 기반 마련을 지원한다.
 - * (저학년) 심층상담 기반 희망직업 포트폴리오 설계 등, (고학년) 취업역량 강화 및 사후관리 등 지원
- 청년 인식의 국정 반영, 청년의 정책 참여 활성화 등을 위해 청년보좌역과 2030자문단*을 본격 운영하고, 정부위원회 청년 비율을 확대한다.
 - * 정책 수립과정 등에 자문 수행(20명 내외, 청년보좌역이 자문단장 겸임)

[글로벌 국가 경쟁력 강화]

- 대통령 주재 인재양성전략회의 운영 등 첨단분야 인재양성 체계를 고도화*하고, 해외 인재 유치·정착을 위한 출입국·이민제도를 개선한다.
 - * 민·관 인재양성 역량 결집을 위한 5대 핵심분야 제시 및 분야별 특화 인재양성 정책 마련
 - ** 점수 요건을 충족한 첨단산업 종사자는 폭넓게 취업을 허용하는 첨단분야 네거티브 비자 신설
- K-컬처의 세계화 및 관광매력국가로의 도약을 위해 콘텐츠산업 핵심인재 양성*, 예술활동 종합지원플랫폼 구축, 한국 방문의 해 운영 등을 추진한다.
 - * 영화, 웹툰 등 장르 특화형 인재(연 2,000명), 콘텐츠 제작·현장 전문가(연 1,700명)

② 공동가치 실현을 위해 함께하는 연대

[지역사회 상생발전 생태계 조성]

- 지역사회 혁신 역량 제고를 위해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(RISE) 구축, 신기술 수요기반 ‘지역혁신 메가프로젝트’ 시범사업* 등을 추진하고, 지역기업-지자체와 연계하여 지역 맞춤형 인재를 육성한다.

* 지역 특성, 연구 역량, 기술 수요 등을 고려한 기술 연구 수행 시범사업(2023~2025년, 5개)

- 지역의 유희자원을 활용하여 육아보육, 주민참여 공간 등을 확충*하고, 학교시설의 복합적 활용**을 통해 지역주민의 활력을 제고한다.

* (사례) 철도 어린이집(2023년 6개소 → 2024년 이후 이후 10개소),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(2023년 9개소)

** 초중고, 대학 등에 학생, 주민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문화·체육·복지시설 등 설치

[사회약자 지원 및 격차 해소]

- 사회위기 대응을 위한 범부처 TF(단장: 교육부 차관)를 구성·운영하고, 여성·고령자 등 고용 약자의 노동시장 참여 확대를 위한 지원*을 확대한다.

* 사회보험 지원 대상 확대(영세사업장 저소득 근로자, 예술인 등, 2023년 1조 764억원), 고령자고용지원금 확대 (2022) 6천명 → (2023) 5.3만명, 장애인 표준사업장 확대 (2022) 120 → (2023) 147개소

- 교육·문화 혜택의 격차 해소를 위해 농어촌 디지털튜터 배치 확대*, 온라인 고교 신설(4개교), 찾아가는 박물관 운영 등을 추진한다.

* 소외지역(농·어촌) 디지털튜터 1인 1교 배치(2022년 34교 → 2023년 340교)

[사회 갈등 완화 및 신뢰 회복]

- 공정채용 인프라 구축*, 채용비리 통합신고센터 설치, 일터혁신 컨설팅 등을 지원하여 근로현장의 공정 채용과 합리적 일터문화를 조성하며,

* 능력중심 채용모델 개발·보급(20개), 기업 컨설팅 지원(150개), 공감 채용 가이드북 배포

- 이념·이해 갈등의 폭을 좁히고 시민사회의 연대감 증진을 위한 생애 주기별 시민교육* 지원과 함께 혐오 표현, 사이버폭력 등 디지털 역기능 예방을 위한 맞춤형 디지털 윤리교육을 추진한다.

* 교육대상(안) : ①학생 ②교사·학부모(교사, 교수, 단체, 학회 등), ③성인(다문화 가정, 노인, 평생교육생 등), ④글로벌시민(이민자, 외국인, 재외국민 등)

③ 모든 국민의 안전한 일상

[일상생활 속 안전 확립]

- 각종 재난을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군중 밀집지역에 현장인파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, 홍수 등 취약지역 실시간 모니터링을 강화한다.
 - ※ 집중호우·홍수 대비 침수우려 취약도로 자동차단 및 경보 방송 실시(90개소, 신규)
- 민감 취약계층·어린이 활동 공간 등의 실내 환경 개선을 추진하고, 스마트 안전 장비·휴게시설 설치 등 안전하고 건강한 일상을 지원한다.
 - ※ 교육시설 안전인증(3,000개소), 민감취약계층(1,750개소)·어린이 활동 공간(4,000개소) 등 실내 환경 진단

[모든 국민의 신체·정신적 건강 보호]

-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적기에 받을 수 있도록 필수·공공의료 확충 등 의료 서비스의 접근성을 제고하고, 청소년, 노인, 장애인 등 대상별 맞춤형 심리상담 및 신체 활동 인프라를 확충한다.
 - ※ 일차 의료기관 중심 비대면 진료 제도화, 보건소 기반 스마트 건강관리 서비스 확대(139개소)
 - ※ 학교스포츠클럽(150개소), 고령자(3개소) 및 장애인(+15개소) 맞춤형 체육시설 확충
- 수입식품 검사를 디지털 자동 심사로 전환하여 신속성과 정확성을 높이고, 사람 중심으로 유해물질 총량을 관리하는 통합위해성 평가를 본격 시행하며, 마약류 오남용 예방·사회재활 정책도 강화한다.
 - ※ 마약류 중독재활센터(누적) : ('22) 2개소 → ('23) 3개소 → ('24~) 17개 시도 확대 추진
 - ※ 대상별 맞춤형 오남용 예방교육·재활프로그램 개발 및 교정-치료-사회재활까지 유기적 지원

[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축]

- 스토킹·성폭력 범죄, 아동학대 범죄 대응을 강화하고, 고위험 대상자에 대해 선제적 관리·행동 통제를 강화하여 재범률을 낮춘다.
 - ※ 「스토킹처벌법」 개정, 민·관 전방위 아동학대 대응체계 구축, 고위험 대상자 취업제한·성충동조절치료 등 맞춤형 준수사항 확대, 고위험자용 전자장치 운영 등
- 스토킹피해자 주거 및 치료회복프로그램 신규 지원,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 강화, 5대 폭력 피해 통합 지원* 등을 통해 폭력 피해자의 조속한 피해 회복을 돕는다.
 - ※ 성폭력·스토킹 등 복합사례에 대해 '통합솔루션 지원단'을 통해 5대 폭력(권력형 성범죄, 디지털 성범죄, 가정폭력, 교제폭력, 스토킹범죄) 피해 통합사례관리 지원(광역 2개소)

제2차 한국수어 발전 기본계획(2023~2027)

- 공정하고 차별없는 수어 사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향후 5년간 수어 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과제를 담은 「제2차 한국수어 발전 기본계획」을 발표한다.
- 이번 계획은 농인이 체감할 수 있는 ‘공정한 문화 접근 보장’을 목적으로 수립되었으며, ▲공정한 수어 교육, ▲차별없는 정보 접근, ▲자유로운 문화 누림 등 수어 사용 환경 조성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.
- ※ 문화체육관광부, 별도 보도자료 배포(2월 6일)
- ※ 위 계획은 「한국수화언어법」 제6조 제1항에 따른 한국수어발전기본계획임

제4차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 대책(2023~2027)

- 하루 평균 천만 명 이상이 이용하는 대표적인 대중교통수단인 지하철의 초미세먼지 저감 등 숨 쉬기 편안한 지하철 환경 조성을 위한 「제4차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 대책」을 발표한다.
- ※ 관련 국정과제 88「미세먼지 걱정 없는 푸른 하늘」
- 그동안 관계부처, 지자체, 철도 운영기관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쳤으며, 지하역사의 초미세먼지 농도를 낮추기 위한 실행방안을 담았다.
- 지하역사는 지하에 위치한 특성상 자연 환기가 어렵고, 좁은 공간에 다수의 이용객이 밀집하여 공기질 관리가 쉽지 않은 여건이다.
- 2021년 지자체 오염도 검사 결과 지하역사는 22개 다중이용시설군 중 초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높으며*, 터널은 외부 오염 유입, 철로 마모, 바닥의 자갈·흙 등 분쇄 등으로 인해 농도가 더 높은 경향**을 보인다.
- * 지하역사($23.6\mu\text{g}/\text{m}^3$) > 전체 평균($15.1\mu\text{g}/\text{m}^3$) > 어린이집($12.7\mu\text{g}/\text{m}^3$)
- ** 터널은 일반인이 출입할 수 없어 다중이용시설 공간에 포함되지는 않으나, 승강장 등에 오염물질을 유입시킬 수 있어 함께 관리하고 있음
- 지난 제3차(`18~`22) 대책에서는 미세먼지(PM_{10}) 농도를 크게 낮추는 성과*가 있었으나, 앞으로는 보다 건강위해성이 높은 초미세먼지($\text{PM}_{2.5}$) 관리를 중요하게 다룰 계획이다.
- * (PM_{10}) `17년  $66.7\mu\text{g}/\text{m}^3$  → `22년 $35.8\mu\text{g}/\text{m}^3$

- 이번 대책에 따라 지하역사 승강장의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를 17% 저감하여 2027년까지 1세제곱미터 당 24마이크로그램으로 낮출* 계획이다.

* 2022년 전국 지하역사 승강장 초미세먼지 자동측정기기 평균: $29\mu\text{g}/\text{m}^3$ 수준(잠정)

- 이를 위해 초미세먼지 고농도 역사 중점 지원체계를 구축하고, 스마트 공기질 관리시스템 적용을 확대하며, 첨단 저감 기술을 도입할 계획이다.

① 건강 위해성을 고려하여 초미세먼지 집중관리 체계로 전환

- 현재 전체 지하역사 승강장에 대해서 초미세먼지 농도를 실시간 관측하고 있는데 지하철 차량, 터널 등에도 실시간 관측을 확대할 계획이다.

※ 2021년 4월부터 전 지하역사 승강장의 초미세먼지 측정 결과를 상시 공개 중

- 지하철 운영기관의 자율적인 실내공기질 관리를 유도하기 위해 2023년에는 시설별 실내공기질 관리 행동지침을 개발하여 보급하고, 2024년 이후 실내공기질 자율관리제* 도입을 추진한다.

* 초미세먼지, 이산화탄소 등의 물질을 실시간 관측이 가능한 센서형 측정기를 설치하여 실내공기질 정보를 종합정보망에 보고 시 자가측정 면제 등의 혜택 제공

② 실시간 측정을 바탕으로 과학적 기반 관리 확대

- 지하역사 승강장 초미세먼지 실시간 측정결과를 분석하여 고농도 지하역사의 오염원을 분석하고, 노선별 이용객수, 노후도 등을 바탕으로 우선순위를 선정하여 맞춤형 예산 지원을 추진한다.

- 2027년까지 지하역사 내·외부 오염도, 교통정보 등 빅데이터 분석 및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공기청정기 및 환기설비를 최적 제어하는 “스마트 관리 시스템” 적용을 확대한다.

※ 현재 인천 일부 지하역사에 적용 중

③ 적극적인 신기술 활용으로 효과적인 공기질 관리 수단 확보

- 2024년 이후 터널 주행 중에 공기 중 초미세먼지 포집이 가능한 집진 차량을 시범적으로 운용하고, 전동차 하부에 부착하여 열차풍에 날리는 철·자갈 가루 등을 즉시 제거하는 미세먼지 저감 장치 시범 도입을 추진한다.

- 역사 승강장 인접 선로(터널)에서 발생하는 초미세먼지 등을 저감하기 위한 신기술을 개발하고 지하역사 현장에 실증 적용한다.

- 【별첨】 1. 2023년 핵심 사회정책 추진계획
 2. 제2차 한국수어 발전 기본계획
 3. 제4차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 대책

담당 부서 <총괄>	교육부 사회정책총괄담당관	책임자	과 장	안웅환 (044-203-7261)
		담당자	사무관	김상덕 (044-203-7267)
<사회정책>	교육부 사회정책총괄담당관	책임자	과 장	안웅환 (044-203-7261)
		담당자	사무관	이은서 (044-203-7262)
<한국수어>	문화체육관광부 국어정책과	책임자	과 장	정원상 (044-203-2531)
		담당자	연구관	위진 (044-203-2538)
<지하역사 공기질>	환경부 생활환경과	책임자	과 장	이경빈 (044-201-6790)
		담당자	사무관	윤재웅 (044-201-6798)